최순실보다 5년 더…뇌물 혐의 반영 가장 무거운 처벌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의미

"비선에 국정 맡겨 국가 위기 자초"

유기징역 최대치 30년 선고 요청

사법절차 회피 등도 구형량 높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규정하고,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한 것은 국가 최고권력자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기강을 뒤흔든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 실세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꿔온 국민의 간절한 희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며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확립하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유린해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며 국가 분열을 초래하고도 반성하고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의 형량을 구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법이 정한 형량이 가장 무거운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정치적 논리로 적법한 사법절차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점도 구형량을 가중시킨 배경으로 지적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주장을 늘어놓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진상을 호도하며 책임을 전적으로 최씨와 측근에게 전가했다"며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벌금 1185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구형 최대치인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무기징역은 사실상 사형 구형이나 다름없는 만큼 검찰로서도 부담됐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여전히 견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의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은 여러 차례 지적됐다. 최씨 사건을 심리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 선고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뇌물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정치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이 부회장 등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이란 것을 알고도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거액의 뇌물로 나아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줄이기 노력 합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세먼지센터 창립식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에 맞설 민주 후보 누가될까

민주 현역의원 출마 교통 정리중

바른미래 원외 후보 영입도 관심

차기 전남지사 유력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향후 선거구도가 주목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개호 국회의원과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민주평화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의 출마가 유력하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유력 후보로 꼽혔던 주승용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어떤 원외 인사가 전남지사 후보로 영입될지 관심이다.

하지만, 향후 변수도 남아있다. 민주당과 민평당 등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고려해 '현역 국회의원 불출마' 요청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개호 의원에게 전남지사 불출마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기 전에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했고, 저의 출마에 대해 당에서도 이제 동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이 대거 지방선거에 나설 경우 의석수에서 자칫 제1당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출마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1당의 지위를 잃게되면 선거기호가 달라지고,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 국회의장 자리와 일부 상임위 의장 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당도 유력 후보인 이 의원을 배제하고 호남에서 전략공천을 할 경우 자칫 상승세인 당심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 안팎의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출마선언 시기를 잡을 계획"이라며 "당에서도 동의를 한 만큼 공식 출마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필요하면 당에 공식적으로 출마선언 시기를 통보할 예정이다"면서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출마가 확실시되는 민평당 박지원 의원도 당 안팎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석으로 원내 교섭단체(20석) 구성이 쉽지 않아 현역 의원 단 1석도 아쉬운 상황인데다, 특히 최근 민평당이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내부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민평당 14석과 정의당 6석을 더해 20석으로 공동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현역 의원 1석이라도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될 경우 공동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정의당이 민평당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당내와 지역에서 저에 대한 출마 요구는 높지만, 공동교섭단체 추진 등이 과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평당 간 지방선거연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또 하나의 변수로 꼽힌다.

한편, 이날 불출마 선언을 한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과정에서 당 지지율이 급락해 현실적으로 민주당, 민평당 후보들과 경쟁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참신한 인물 내세울 것"

권은희 바른미래당 시당위원장…5·18특별법 등 조속 처리 의지

바른미래당 광주·전남 현역 국회의원들의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전남지사 출마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27일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에 지역구를 둔 현역 국회의원들의 광주시장 선거 출마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신 경제계와 법조계 등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지닌 분들로 덕망있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치신인들을 단체장 후보로 영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광주지역 의원은 모두 3명으로, 4선 박주선(동남을), 김동철(광산갑) 의원과 재선의 권 위원장(광산을)이다. 박 의원은 당 공동대표, 김 의원은 원내대표, 권 의원은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당직을 맡은 데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 등에 따른 의원 수 확보 차원에서도 출마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와 관련 권 위원장은 "광주를 믿고 맡길만한 참신한 인물을 발굴해 선보이고 판단을 구하는 게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는 차원이지 바른미래당의 의석수 등 원내 지형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시장 후보자 영입 대상 중 경제계 인사와 관련해서는 "자수성가 기업가보다는 정책 등 경제·산업분야 정책활동을 지역에서 꾸준히 해오신 분을 고려 중이며, 늦어도 3월 말이면 영입 대상자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기석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르게 될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에서는 "기존 정치인, 정치신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제 막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18 진상규명특별법안 처리,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5·18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이슈를 주도해 온 것이 우리당 소속 김동철 원내대표다. 법안 통과까지 당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28일 법사위가 파행만 되지 않고 정상 가동된다면 오후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초선의원시절부터 관심을 쏟아왔던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광주시 모두 이전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복수의 이전 후보지까지 나온 상태지만 이전 대상 지자체와의 갈등 내지 협의가 지난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진단한 뒤 "광주 지역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 입장에 맞춰 적극 대응하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